

제4차 국가철도망 호재 달고… 위례신도시 아파트값 급등

(위례과천선·위례삼동선)

위례 0.21%, 일산 0.1% 등 상승

위례더힐55, 85㎡ 15.9억에 거래
올 초 13.9억… 거래액 2억 급상승

위례자연래미안e편한세상 75㎡
불과 4개월만에 거래액 2억 뛰어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교통 호재를 맞 본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5000만원에 거래됐다. 위례롯데캐슬 전용면적 75㎡는 지난달 12억원에 거래된 뒤 호가 1억원이 넘게 오른 13억5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래미안위례나 위례푸르지오는 현재 매물이 없다”라며 “철도망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가 상승한 매물도 있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위례과천선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4호선 경마공원역까지 있는 15.2km 노선이었지만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까지 20.2km 연장을 결정했다.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위례삼동선은 위례중앙역(가칭)에서 성남시 수정구 을지대, 중원구 신구대·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까지 총 13.4km다.

이밖에 4차 시행계획안의 신규사업

은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제2경

인선(청학~노은사) ▲별내선연장(별

내역~진접선) ▲강동하남남양주선(강

동~하남~남양주) ▲인천2호선 연장

(인천서구~고양일산서구) ▲고양은평

선(시절~고양시청) ▲서부권 광역급

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송파

하남선(오금~하남시청) ▲분당선 연장

(왕십리~청량리) ▲분당선 연장(기흥~

~오산)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등이 확

정됐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6호선 남양주 연장을 올려놨다. 서울 2호선 연장은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국내상장사 10곳 중 8곳 “新외감법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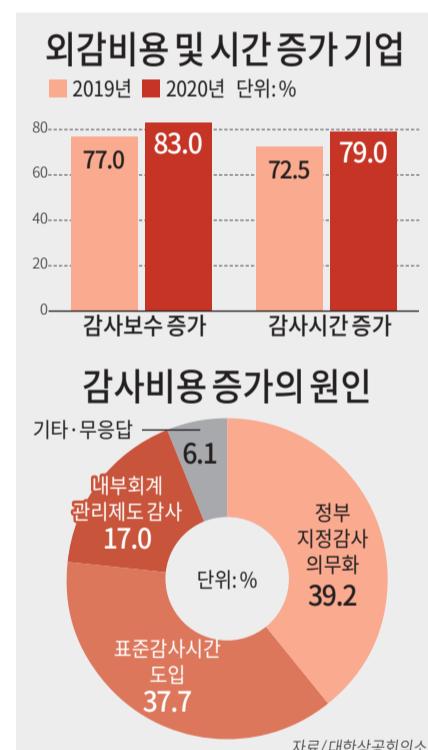
대한상의, 305곳 대상 조사 실시
상장사 83% 전년비 감사보수 증가
“인력·조직 부족 中企, 더 큰 부담”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외부감사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돼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한데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로 기업의 협상력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18년말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를 조사해 2일 내놓은 결과, 2020년도 감사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상장사가 전체의 83%에 달했다. 79%의 상장사들이 감사시간도 증가했다고 응답해 외부감사와 관련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행 첫 해인 2019년은 감사시간 및 비용 증가가 어



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지만, 2020년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보수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감사제(39.2%) ▲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17.0%) 등을 꼽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 협상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적정 감사시간으로 기업 규모 및 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라 산출되는 표준감사시간은 도입된 후 기업들에게 2020년 감사시간 증가율을 조사했더니 직전년도 대비 ‘10~50% 증가’(42.6%), ‘10% 미만 증가(21.0%)’ 순으로 답했으며 ‘50% 이상 증가한 기업’도 9.9%로 나타났다.

감사시간 증가에 따라 감사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40.7% 기업이 ‘표준감사시간 관련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애로경험 기업 중 87.1%가 ‘감사보수 증가’를, 33.1%는 ‘과도한 감사시간 단정’을, 29.0%는 ‘거래량이나 거래구조의 복잡성과 무관한 감사시간 적용’ 등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위, 주식리딩방 등 대가받은 유튜버 신고 의무화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 방안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 가 개별적(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것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피해사례는 지난 2018년 905 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663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우선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상담해주는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수입 종류가 구독자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 별 풍선 등 간헐적 후원 등 투자조언의 직

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료회원 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을 등록해야 한다. 통상 주식리딩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 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한다. 이 경우 일대일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이 이뤄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에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국 탄소중립 목표〉

구분	탄소중립 도달점	감축대상	탄소배출 비중 ¹⁾
EU	2050	온실가스	8.0%
미국	2050	온실가스	14.5%
중국	2060	이산화탄소	27.9%
일본	2050	온실가스	3.0%

주:1) 2019년 기준

/자료=각국 발표자료 취합, OWID

“韓,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서둘러야”

한은,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현황 EU·美·中 등 2050 탄소중립 선언 “바이든 美 대통령 파리협정 복귀에 주요국 탄소중립선언, 대응 빨라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빨라지면서 나라별로 산업구조나 기술 수준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탄소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최근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감축 및 2050년 중립 달성을, 미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중국은 2030년 정점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시작해 2060년까지 배출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은은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 가공식 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 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기반 정책은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세 등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

데 최근 성장세가 빠르다. 중국이 올해부터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독일 역시 난방 및 수송부문에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탄소세는 현재 25개국에서 실시 중이며, 탄소국경조정세는 EU에서 2023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비시장기반 정책은 직접규제와 공공 투자 등이다.

현재 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의 무화 등과 같은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35년 중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 부양 효과로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그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은 유발 효과가 큰 저탄소산업이 확대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가는 화석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완만히 상승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차이 등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